

## 자유주의의 4월혁명 네러티브와 사회 심리\*

— 『동아일보』와 『사상계』의 비교를 중심으로

윤 상 현\*\*

### [초 록]

4월혁명의 주체에 대한 전유는 1950년대 한국 자유주의 세력의 성격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동아일보』는 대구학생시위-마산시위-4·19 시위를, 선구자-희생자-구원자라는 영웅 서사구조를 통해 3개월여 동안의 운동에서 기층민을 수동적인 희생자로 구성했다. 이들은 4월혁명에서 대학생들을 자유진영체제의 질서유지대로 적극 호명함으로써 보다 체제유지적인 상층 부르주아적 위상을 보여주었다.

자유주의세력으로서 민중에 대한 엘리트주의적 인식을 공유하고 있었지만, 『사상계』, 『경향신문』, 홍사단계열은 개신교, 천주교 등 일제시기 이래의 종교적이고 도덕주의적 성향을 띠고 있었으며, 청년학생들을 민권운동, 자유와 권리를 위한 저항운동의 ‘주체’로 자리매

\* 이 논문은 2019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진행한 4월혁명 60주년 기념 특별 기획 연구의 지원을 받아 작성되었다.

\*\* 경남대학교 역사학과 조교수

주제어: 자유주의, 자유민주주의, 3·15, 4월혁명, 비상입법회의  
Liberalism, Liberal Democracy, 3·15, April Revolution, The Special Legislative Council

김하는 과정에서 사월혁명의 향후 과제로서 정신혁명을 강조함으로써 청년 학생들을 정신적으로 이끌고 계몽하며 지도할 지식인의 역할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지식인혁명’이라는 틀을 구성하고자 했다. 소부르주아적인 불안정한 위치에 있었던 이들은 ‘실력양성론’과 같은 준비론을 통해 불안정한 지식계급이 성장하고 안정화할만한 물질 토대와 시간적 경제적 준비기간의 확대를 구했으며, 관념적이고 종교적인 지적 체계들로 다른 계급들과 구별 짓고자했다. 당시 제안된 ‘비상입법회의’의 기각과 만들어진 신화는 기성 계급구조를 유지하고 ‘반공’을 자명한 종교로 내면화하게 했다.

## 1. 4·19 학생운동? 혹은 4월혁명

4월혁명은 2·28 대구사건으로부터 3·15 마산사태를 거쳐 4·19 시위와 4·25 교수단시위 및 4·26 시위까지 약 3개월 이상 고등학생, 일용노동자, 대학생, 교수 등 도시지역의 다양한 계층이 참가한 운동이었다. 기층민부터 남녀노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참가자들에 관한 실증연구가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4월혁명은 여전히 대학생이 주도한 학생운동이라는 이미지가 강하게 남아있으며, 이에 관해서는 1980년대부터 최근까지 꾸준한 문제제기가 있어왔다. 최근의 4월혁명 관련 연구들은 도시민민 등 다양한 4월혁명의 주도세력을 실증적으로 드러내거나<sup>1)</sup> 『사상계』 지식인들이 4월혁명을 자신들의 의도대로 해석했다는 점에 주목하기도 했다.<sup>2)</sup> 이상록도 일찍이 ‘민주주의 대 독재’라는 이항대립의 틀을 넘어서서 대학생 및 언론 매체들에 의해 기층민중의

1) 오재연(2014), 「4월혁명의 기억에서 사라진 사람들」, 『역사비평』 106, 역사문제연구소.

2) Shimokawa, Ayana (2014), 「4·19 해석의 재해석: 『사상계』 지식인이 만들어낸 4·19 민주혁명」,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내석사학위논문.

데모가 전유되었음에 주목했으나 4월혁명 이후의 지식인들의 흐름이 ‘경제제일주의’로 수렴되었음을 강조하여 언론매체들이나 각 사회세력들의 계층적·계급적인 차이를 간과한 측면이 있었다.<sup>3)</sup>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시위에 참가한 대학생들과 이 시위를 전달하는 언론매체들의 지식인들과 언론매체‘들’을 모두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계급적으로 동질적인 지식인들로 전제하거나, 대학생들과 지식인들을 구분하지만 각기 다른 그들의 행동의 배경에 대한 분석과 설명틀을 결합함으로써, 결국 지식인 주도의 경제담론으로 흡수되어간 4월혁명이라는 새로운 네러티브로 수렴되어 4월혁명이 대학생·지식인 주도의 학생운동이었다는 서사구조를 오히려 넘어서지 못한 측면이 있다.

이 글에서는 4월혁명에 관해 몇 가지 논점을 제기함으로써 4월혁명 자체와 그 해석을 둘러싼 논의를 진전시켜보고자 한다. 우선 혁명에는 사회계층적인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혁명에서 역할이라는 측면에서도 다기한 사회세력들이 연관된다. 그 역할에 따라서 최소한 당시 혁명에 참가한 사회세력들, 이 혁명을 지켜보며 해석하여 전달한 세력들, 이때 구성된 혁명의 네러티브를 재생산했던 사회세력들, 그 과정에서 정치적 권력을 획득한 세력들 등이 있다. 특히 ‘당시 이 혁명을 지켜보며 이를 해석하여 최초의 네러티브를 구성하여 전달한 세력들’이 혁명을 어떻게 전달했는지 그리고 왜 그러한 이미지를 형성했는지에 관한 담론적 분석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의 논점으로 ‘자유민주주의’라는 기표 자체가 갖고 있는 이데올로기적 측면에 관한 것이다. 기존 연구에서는 『동아일보』, 『사상계』 등의 언론매체 — 때로는 4월혁명에 참가한 대학생 — 들을 자유민주주

3) 이상록(2011), 「경제제일주의의 사회적 구성과 ‘생산적 주체’ 만들기 — 4·19·5·16 시기 혁명의 전유를 둘러싼 경합과 전략들」, 『역사문제연구』 15, 역사문제연구소. 1960년대부터 4월혁명과 관련된 방대한 기존 연구 성과들은 오제연과 이상록의 연구의 서론을 참조할 수 있다. 본고는 그 이후의 연구성과들의 논점에 방점을 두고 다루고자 한다.

의 ‘세력’으로 전제하는 측면이 있다. 헌법학에서는 자유민주주의를 정의할 때, 헌법적 제한적 정부, 법의 지배, 개인의 권리의 지지라는 점에서 자유주의를 정의하고 보통선거에 의한 정부 선출을 민주주의로 정의하여, 이 둘의 결합을 자유민주주의로 정의해왔다.<sup>4)</sup> 이러한 정의는 자유민주주의를 법치, 개인의 권리, 제한적 정부, 보통 선거 등 ‘정치문제’로 치환하고, ‘민주주의’도 가장 협소한 의미의 정치로 치환하는 효과를 낳는다. 4월혁명을 둘러싼 사회세력들을 모두 자유민주주의 ‘세력’으로 정의하는 순간 그 언어적 효과는, 이들이 ‘정치문제’를 둘러싸고 싸웠으며 빈곤 및 후진성 등 경제적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이 ‘경제문제’로 수렴되었다는 당대 논의지형을 그대로 답습하는 형태를 띠게 된다는 점이다. 그들의 ‘지향’이 자유민주주의라고 할 수는 있으나 그들을 모두 자유민주주의 ‘세력’이라고 분류할 수는 없을 것이다. 자유민주주의를 주장했던 자유당-민주당-4월혁명 학생들이 모두 진정한/왜곡된 정도의 차이만 있는 자유민주주의 ‘세력’이 되어, 사회운동의 문제기도덕의 문제로 치환된다. 이데올로기적 사회세력은 그들의 주장 및 지향뿐만 아니라 당시의 상호 사회적 관계 속에서 자리매김 되어야 한다. 각 사회세력들은 자신들의 사회경제적 포지션에 따라서 정치문제에 접근하며 격렬한 정치적 변동기일수록 그들의 정치경제적 입장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러한 사회경제적 위치를 보다 드러낼 수 있는 범주화가 필요하다. 자유주의 밖에서 서구 자유주의의 역사를 서술한 연구가 사회세력을 지칭할 때 냉전자유주의를 사용하지만 자유민주주의를 사용하지 않는 것도 유사한 관점을 표현한 것일 것이다.<sup>5)</sup>

이 글에서는 1950년대 사회세력들, 특히 자유주의적 지식인들 및 언론매체 내부의 다양한 세력들의 연원과 이들의 지성사적 배경에 관한

4) 조한상(2015), 「자유주의, 민주주의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원광법학』 31,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5) 앤서니 아블라스터(2007), 『서구 자유주의의 융성과 쇠퇴』, 나남.

연구에 기초하여, 3개월간의 혁명 당시 언론매체들이 4월혁명을 어떻게 전달했는지 그리고 매체들 간의 어떤 편차는 없었는지 그러한 네러티브가 왜 생겨났는지에 대해서 분석하고자 한다.

정치적 세력은 고정적이라기보다는 정치경제적 결점점이 되는 시기에 이합집산하면서 유사한 사회문화적 경험을 통해서 그 경향성이 두르러지고 강화된다. 1950년대 자유주의세력들은 4월혁명의 전개과정 및 그 성격의 해석에서 적극적인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참여를 했으며, 4월혁명 이후 정치적 권력을 잡게 되는 제2공화국기에 정치적 차이가 극대화되면서 그 양 세력의 갈등이 극적으로 표면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1950년대와 1960년대에 언론사 사주로서 국무총리 혹은 국토건설본부 기획부장, 신민당 국회의원 등을 역임할 만큼 적극적인 정치적 실천을 보임으로써 보다 담론 분석이 용이한 대표적인 두 매체 『동아일보』와 『사상계』를 중심으로 분석하고자한다.<sup>6)</sup> 이 글에서는 이들이 사월혁명을 어떻게 전유하였는지 그 과정을 재구성함으로써 이러한 전유가 어떠한 역사적 결과와 의미를 낳았는지에 접근해보고자 한다. 일간지와 월간지의 매체적 특성을 고려해서 정량적 접근보다는 담론 분석을 시도하고 개념사적 방법으로 보완하고자 했다.<sup>7)</sup>

6) 1950년대 『사상계』의 편집방향, 편집위원들의 성향, 그들의 출신지 등 매체적 특성에 관해서는 윤상현(2019), 「『사상계』의 시기적 변화와 ‘개인’ 개념의 양상」, 『인문논총』 49, 경남대 인문과학연구소, 1-2장 참조.

7) 개념사 방법론에 관해서는 친관타오(『관념사란 무엇인가 1 이론과 방법』, 푸른역사, 2011) 등을 참조.

## 2. 혁명의 과정과 주체 — 『동아일보』의 4월혁명 서사구조

### 2.1. 2·28 대구사건 — 신익희·조병옥의 죽음과 연관 짓기

4월혁명의 과정은 사건이 일어난 공간과 주도세력을 고려할 때 크게 네 단계의 결점점이 있다. 첫 번째는 3·15선거 전 대구에서 있었던 2·28 대구사건, 그리고 3·15 선거당일의 마산사건, 세 번째가 서울지역 4·19과 직후 전국적으로 확산된 시위운동, 네 번째가 4·26 교수단 시위 및 이승만대통령 하야이다.

『동아일보』에는 1960년 2월 15일 서거한 민주당대통령후보 조병옥의 영결식 및 그와 관련된 기사와 대구에서 열린 자유당의 동원선거 기사가 나란히 게재되었다. 2월 28일과 29일 양일간 『동아일보』는 1면 지면에 27일 대구에서 있었던 자유당의 강제동원에 대해서 “사 년 전 故해공선생이 사자후를 한” 곳에서 약 이십만 명의 시민이 강제 동원 되었다고 보도했다.<sup>8)</sup> 29일자에 1200여명의 대구고교학생들의 시위는 3면에 2단짜리 기사로 실렸지만<sup>9)</sup> 다음날인 3월 1일자 1면 전면 6단 기사에는 ‘대구학생데모사건’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장면박사 연설 날의 “강제등교명령”에 대해 책임을 추궁하겠다는 기사가 실렸고, 1면이 거의 민주당 관련 기사로 도배되다시피 했다.<sup>10)</sup> 당일 석간에도 1면 기사에 다시 대구사건을 다루었는데 민주당과 자유당의 입장을 실을 때도 순서를 민주당 — 자유당 순으로 게재했다.<sup>11)</sup> 칼럼기사에서 민주당

8) 『동아일보』 1960.2.28; 『동아일보』 1960.2.29.

9) 『동아일보』 1960.2.29, 「학생들이 시위, 학원을 정치도구화말라고」.

10) 『동아일보』 1960. 3.1, 「민주발전예 헌신, 장면박사, 부산서도 선거유세」, 「광주 학생사건상기, 민주당, 경찰폭행규탄담화」, 「선거후에 다시 회합, 민주당」, 「정계스냅 — 용감한대구학생에 경탄」

11) 『동아일보』 3월 1일 석간, 「서거 ‘뿔’에 휩쓸린 경남북」.

구파와 신파 간의 내분과 갈등을 비판하면서도, 민주당관련 논설 및 기획기사가 계속 실리고 있었다.<sup>12)</sup>

『동아일보』는 4년 전 신익희의 죽음과 같은 장소에서 자유당 유세에 시민들이 강제 동원되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 기사 옆에 조병옥의 서거 기사를 같이 실음으로써 독자로 하여금 신익희의 죽음에 대한 모독감을 불러일으키거나 이들 신익희·조병옥 두 사람의 죽음이 연속된다는 점에 의구심을 불러일으키는 편집을 사용한다. 대구학생시위 자체의 기사보다도 그 사건과 관련된 민주당의 태도와 대응기사에 더 많은 기사를 실음으로써, 보도지면을 통해 『동아일보』 및 민주당이 자유당과 정치적인 전면전을 치루고 있다는 ‘인상’을 전한다. 학생시위운동 자체보다 그에 대한 정치권 특히 민주당의 기사가 전면으로 다루어진다.<sup>13)</sup> 여기에 민주당 구신파간의 갈등을 연일 보도함으로써 『동아일보』가 민주당에 비판적이며 정치적으로 객관적이고 정치적 입장이 없으며 중립적인 포지션에 있는 듯한 태도를 유지한다.

『동아일보』가 3·15 직전까지 학생시위를 전달하는 방식은, 학생의 ‘학원의 자유’ 시위를 민주당의 부정선거반대투쟁이나 장면 유세와 관련지어 전달하는 방식이었는데, 여타의 대중매체가 거의 드물었던 1950년대에 일간신문의 반전면 기사를 사진과 함께 뽑는 편집 방식의 강력한 표현수단을 구사했다.<sup>14)</sup>

12) 『동아일보』 1960.3.1. 석간, 「조박사 수행20일, 햇빛 못본 정철을 간명 정치적 최후유언된 셈」; 『동아일보』 1960.3.3, 「논단, 새로운 정국과 민주당의 금후」; 『동아일보』 1960.3.3, 「불법단체 제재책은?」; 『동아일보』 1960.3.4, 「도살장에 몰린 민주주의」; 『동아일보』 1960.3.6, 「건전한 야당으로 발전, 신파와 감초조월에 감격」; 『동아일보』 1960.3.4, 「민주당, 정부의 ‘선거방치시령’ 전모폭로」.

13) 『동아일보』 1960.3.7, 「사실 권력에 눌리고 생활고에 치진 시민들」; 『동아일보』 1960.3.8, 1면 1면기사 「부정투표방지에 전력」; 두 번째 기사 「이대통령 종신제론까지 군인 공무원 등 2천명 동원」; 『동아일보』 1960.3.9, 1면기사 「민주당, 3인조 투표방식 폭로」; 『동아일보』 1960.3.11, 1면기사 「모의투표지 폐지토록」; 『동아일보』 1960.3.14, 1면기사 「부정선거 시정을 요구, 민주당 이대통령에 공개장」.

## 2.2. 3·15, 4·11 마산시위 — 축소하기와 거리두기

『동아일보』는 3·15 선거 당일 「호외」를 발행하는데 기사는 단 하나였다. 「선거의 불법 무효선언, 민주당 법정투쟁결의」라는 기사였고 3월 16일에는 「민주당 선거의 무효선언」이 헤드라인 기사였다. 이날 선거 당일 전국 각지에서 있었던 테러사태가 있었음을 보도하면서, 민주당 마산시당 간부들이 3월 15일 부정선거 규탄을 주장하다가 “마산서 데모 군중이 지서를 습격”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마산중심지에서 수 천 **군중들이** ‘부정선거를 즉시 정지하라’고 외치면서 시작된 데모는 마침내 경찰과 충돌 일개 경찰지서를 파괴하고 또 한곳의 지서를 소실시키고 칠 명의 사망자와 칠 십 여 명의 부상자를 내는 **일대불상사**를 빚어내었다. 이들 군중은 경남 경찰국을 비롯한 마산주변경찰서에 급파한 응원대에 의하여 이날 밤 11시경 **겨우 진압**되었다. 즉 이날 하오 7시30분경부터 **무질서하게** 움직이기 시작한 수천 명의 군중들은 마산시가를 휩쓸기 시작, 남성동 지서를 포위하고 돌을 던져서 지서창문과 기물을 파괴<sup>15)</sup> (이하 강조는 인용자)

사건을 전하는 태도에서부터 사건을 시간 순으로 전달하지 않고, 경찰지서를 습격한 사건을 먼저 전하고, 기사의 맨 말미에 가서 하오 3시에 있었던 부정선거 배경 시위에 경찰들이 소방차를 몰고 와 해산시킨 일을 전했다. 경찰지서를 습격한 폭력행위의 사건이 훨씬 주목되는 점이고 이 “무질서”한 군중들은 “겨우” 진압되었다고 함으로써, 빠르게 마땅히 진압되었어야 한다는 점을 전달한 다음에 이 데모가 폭력화된 배경을 언급했다. 이러한 태도는 다음 날 사설에서 보다 명확히

14) 『동아일보』 1960.3.11, 「전국에 번지는 학생데모 ‘학원의 자유’외치며」.

15) 『동아일보』 1960.3.16, 석간 3면 「마산서 데모군중이 지서를 습격」.

드러난다. 마산사건에 대한 사설이지만 반 이상이 민주당 본부의 선거 무효 발언과 미국 워싱턴 주민의 반미 우려라는 여론에 대한 사설이 차지했고, 마산 시위에 관해서는 “불행한 일”로서 상대적으로 짧게 부정적으로 언급되었다.

경남마산에서는 **뜻밖에도** 수천군중이 데모를 하다가 칠명 사망, 근 오십명이 중경상했으며, 또 데모대의 투석, 방화로 경찰서 지서 삼개소를 **파괴 혹은 소실한 불상사**를 일으킨 뒤에, 심야에 이르러서야 흥분된 군중을 **겨우 진압**했다한다 … 물론, 이번 마산 사건은 극히 불행한 일이었고, 또 **없었던 것만 못하게** 크나크게 유감스러운 일이었다. 그리고 그러한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우리이긴 하지마는 … 당국자와 여당은, 이번 마산사건을 **의법처단**하는 것까지는 좋으나, 사상자에 대한 적절한 처리와 사후수습책에 있어, 그들이 **연소학생들**이니만치 정상을 참작, 온건한 조치가 취해지기를 각별히 바란다.<sup>16)</sup>

이들은 민주당 본부에서 말하듯이 이승만이 4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 부정선거가 무효가 되기를 바라지만, 이 일이 이러한 폭력적인 시위로 화하는 것은 빠르게 ‘진압’하기를 바란다. 부정선거에 항의해야 한다고 학생 시위를 대서특필하며 선동에 가까운 기사를 헤드라인으로 전면에 실기는 했지만, 그 분노가 수 천 군중이 되어 경찰서를 향해 가는 것은 “의법처단”을 해도 좋은 행위이고 “연소학생들”만의 치기 어린 것으로 축소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16일자 기사를 통해 『동아일보』 논설자는 이 시위의 참가자들이 “사망자나 부상자는 유아로부터 성장년에 이르는 각계각층”이라는 점을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주도자를 학생으로 축소한 후 이 폭력사태의 의미도 축소해서 의법 처리하라는 태도를 보인다. 부정선거에 항의하고 반대는 하지만 공권력에

16) 『동아일보』 1960.3.17, 석간 사설.

의한 수 명의 타살이 일어났는데도 이에 대한 문제제기보다는, 타살당한 군중의 방법이 평화적이고 질서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의제로 삼았다. 마산사태가 정치문제로 비화되자 『동아일보』는 칼럼을 통해 3월 17일 폭력성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마산사건을 어린 사람들의 ‘실수’로 폄하한다.<sup>17)</sup> 이 칼럼에서 『동아일보』는 민주주의의 핵심이 “질서유지”이고 폭력성이 개입된 시위를 들어 그 시위의 주체들을 20세 전의 학생들로 축소함으로써 ‘시민 전체’, 인간과 생명의 문제가 아니라 일부 어린 ‘학생’들의 폭력 문제가 된다.

경찰의 총탄에 의한 7명의 민간인 사망자가 발생한 사건이 일어났는데도 그 다음날인 18일 『동아일보』의 사설은 선거에 관한 비판적 사설을 전했을 뿐이고, 정치 칼럼란인 ‘정계스냅’에도 선거에 관한 의원간의 기사만이 실려 있다. 3면에서야 마산사건에 대해 각 기관이 “발포합법여부검토” 중이라는 기사를 보도했다.<sup>18)</sup> 이 이후에도 마산사건에 대한 사설이나 칼럼 없이 사회면 기사만이 실리다가 3월 20일이 되어서야 국회 내무위원회를 보도하면서 헤드라인 기사가 되었다.<sup>19)</sup> 인명에 대한 이러한 무감각, 인간의 생명이라고 하는 가장 큰 기본권에 대한 이러한 무감각은, 장면 유세현장에 강제 동원한 학생들의 “듣는 자유”라는 기본권에 대한 긴 반박기사와 대조적일 수밖에 없다. 여기에는 마산지역이 한국전쟁기부터 좌익성향이 강했다는 묵시적인 요인 외에도<sup>20)</sup> 이들 『동아일보』의 논진이 되었던 일제시기 이래 자유주의 지식인들의 성향도 연관성이 있을 것이다. 1910년대 재일유학생이던 송진우, 장덕수 등은 ‘천부인권’ 자체를 시기상조라 하여 그 권리를 부인하기도 했으며, 인간의 기본 권리를 유보할 수 있는 것으로 다루기도

17) 『동아일보』 1960. 3.17 「횡설수설」.

18) 『동아일보』 1960.3.18.

19) 『동아일보』 1960. 3.20, 조간 「정부와 야당 보고 현격, 국회 내무위 마산사건에 질의」.

20) 이은진(2004), 『근대마산』, 경남대학교 출판부.

했다.<sup>21)</sup>

3월 20일에야 데모대에 실탄을 쏘았다는 사실을 문제 삼는 사실이 실렸다. 그런데 이 사실이 내놓은 해결책과 민심수습책은 다음과 같았다.

경향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선거보복을 그만두게하고, 야당계라고 해서 파면되었던 공무원들을 복직시키고, 마산사건의 관계자들을 관대히 대접하여주고, 경향신문정간처분을 해제하여준다고 하면 민심은 대번에 풀어질 것을 확실히 내다볼 수 있는 것이다. 앞으로는 다시 불법선거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과 공약구장실현에 매진하겠다고 하는 것을 행동으로써 성의를 보여준다면 백성들은 곧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sup>22)</sup>

수습책에서 『동아일보』는 “백성”들에게 시혜를 베풀고 범법자들인 사건관계자들을 대접해주면 백성들이 이 사건을 곧 잊어버릴 것이라고 하는 엘리트적 태도를 보였다. 마산사건에 대해 이승만정부와 자유당이 “민주당 또는 어른들이 뒤에서 어린 학생들을 선동해서 앞장을 세워 죽인 것”이라고 한데 대해 반박하면서 “어린 학생들이 어른들을 선동하고 격려했다”<sup>23)</sup> 입장을 강조했다.<sup>24)</sup> 마산사건의 진상 그 자체보다도 자유당의 민주당 공격을 반박하고 뒤집기 위해 “아이들이” 주도했음을 재삼 강조한 것이다.

한편으로 「정계스냅」이라는 칼럼은 정식 기사가 아닌 민주당 국회의원의 말을 전하는 방식으로 마산사건의 원인과 당시 상황에 대해 칼럼을 실었다.

21) 윤상현(2019), 「관념사로 본 개인 개념 — 유명론적 전환을 중심으로」, 『인문논총』 76(2).

22) 『동아일보』 1960.3.20, 석간 사설 「또 민심수습책을 말함」.

23) 『동아일보』 1960.3.22, 「마산사건과 학생」.

24) 『동아일보』 1960.3.25, 「국회조사단의 落穂 마산사건」.

“이번 사건으로 총살된 사람이나 부상을 입은 사람들은 거의 전부 극빈층의 자제들뿐인데 그들이 어째서 ‘데모’대 선두에서 희생을 당했는가하면 **극빈층가정**에는 전혀 투표를 할 기회가 부여되어 있지 않았던 까닭에 **부녀자들**이 내 표를 달라고 지서 앞에서 외쳤을 순간 그들이 느낀 가정적인 울분이 마침내 폭발을 하였던 것이라”고 설파 … 어떤 **16세 되는 여학생**은 총에 맞아 비틀거리자 경찰관들은 이 **여학생**을 방망이로 구타하여 거의 절명케 하여 **시궁창에 밀어 넣어 버렸는데** 뒤에 근처의 시민들이 끌어내어 치료하여 겨우 생명은 건질 수 있을 듯하고 성남동파출소에서는 어떤 **30세 식모를 벗겨놓고 O부**를 방망이로 구타한 만행을 자행하였다는 이야기<sup>25)</sup>

마산시위의 원인이 극빈층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고 그 주도세력과 희생자들이 대부분 극빈층의 자녀라는 중요한 전언이 있음에도 이에 대한 취재나 분석기사는 『동아일보』에 실리지 않았다. 더구나 시위에 참가한 “부녀자”들이 표를 달라고 외친 원인은 “가정적인 울분”이 폭발한 것이라는 전언을 실었다. 말미에 “이야기”라는 마치 ‘전해 들었으니 그냥 신는다’는 뉘앙스의 보도 태도로, 후속 기사도 없이 가십성의 칼럼으로 전달되었다. 특히 두 여성 희생자에 대한 폭력 장면의 묘사는 현장에 있는 것처럼 지나치게 자세하고 생생하며 여수순천사건을 연상시키면서 자극성을 띠고 있다. 독자에 대한 이러한 기사의 효과는, 1) 여성의 어린 나이를 적시하고 자극적이고 현장에 있는 듯한 구체성으로 인해 관음증적인 강렬한 소비를 부추기며 2) 엄숙하기 그지없는 1면 정치란 기사에 대비해서 정식기사가 아닌 국회의원 동향 등을 보내는 칼럼란에 전달함으로써 어떤 책임 소재 없이 가볍게 소비하도록 하며, 3) 독자로 하여금 이 어둡고 ‘순수하지 않은’ 뉘앙스를 풍기는 사건에 대해 보도자가 갖고 있는 심리적 거리를

25) 『동아일보』 1960.3.26, 「정계스냅」.

보여준다. 그리고 결국에 이러한 보도 태도에는 보도자 및 편집자의 사건에 대한 거리뿐만 아니라 읽는 독자들에게도 그 심리적 거리를 전달한다.<sup>26)</sup>

4월 11일에는 3·15 당시 시체가 발견됨으로써 마산에서 삼천여시민이 데모를 개시하고 제2차 마산사태가 발발했다. 다시 총 백여 명이 경찰에 의해 발사되었고, 1명이 사망하였으며, 마산에는 수만 명의 시위로 확대되었다.<sup>27)</sup> 경찰응원대가 통과하지 못하도록 천여 명이 경찰서 주변에서 도로를 막고 밤 11시까지 시위를 계속했다. 삼천 명의 군중이 경찰서와 파출소뿐만 아니라, 동양주정회사, 도자기공장 등을 파괴하기까지 했다.<sup>28)</sup> 그러나 『동아일보』 12일 석간 사설에는 기사만 있을 뿐 사설이나 칼럼은 언급하지 않았다. 12일에도 마산에는 만여 명의 군중 데모가 있었는데, 4·13 석간 사설에야 ‘이런 불상사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자유당정부가 삼일오선거의 불법 무효를 솔직히 자인하고 자유선거를 다시 실시하는 것이 가장 현책’이라 할 것이라고 언급되었다.

이미 상황은 4월 11~13일의 마산항쟁이라고 부를 만한 시점이었는데, 『동아일보』는 시위가 폭력성을 띠는 순간 이를 경계하고 냉각시키려 애쓰며, “민중항쟁의 전위조직이요 관권에 대한 항거의 거점인 민주당”이 기본방침을 세울 것을 촉구하였다.<sup>29)</sup> 수만 명의 마산 시민의 참가에도 불구하고 이 제2 마산사건은 3면 사회면의 지역란에 몇 단 정도로 보도되었다.

26) 역사적으로 남성화자는 ‘여성’을 보호받을 어머니에 가까운 성과 그렇지 않은 창녀에 가까운 소비대상으로서 성으로 대상화하여 구분해왔다. 권명아(2005), 『역사적 파시즘 — 제국의 판타지와 젠더정치』, 책세상.

27) 『동아일보』 1960.4.12, 석간.

28) 『동아일보』 1960.4.12, 석간

29) 신상초, 『동아일보』 1960.4.15, 조간 논단 「민중공화국은 어디로」.

2.3. 4·19 — ‘모범적인 대학생시위’, 영웅 신화의 서사구조

18일 오후 1시부터 고대생 3천명은 ‘마산사건 책임지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에 나섰다. 이들은 ‘마산학생 석방하라’, ‘기성세대는 각성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는데, 이철승은 국회의사당 앞에서 ‘고(故)인촌선생도 인생의 역사는 구원하다는 말씀으로써 학생들이 도에 넘는 행동을 삼가도록 교훈하신 것을 고대학생들은 상기해야 된다’고 충고하고 농성데모를 하던 학생들은 농성을 중지하고 해산했다.<sup>30)</sup>

마산에서 발단한 학생데모는 각지에 파급되어 18일에는 부산 동래고교와 서울 고려대학생들이 데모를 감행했으나 과격한 충돌은 없었고 특히 고대학생시위는 이를 제지하려는 데서 경찰과의 충돌이 약간 있었을 뿐 처음부터 이성과 질서를 잃지 않은 것이 다행 —.<sup>31)</sup>

마산의 폭력사태에 계속된 유감을 표명했던 『동아일보』는 ‘이성과 질서를 잃지 않’은 고대학생시위를 1면 전면 기사로 실었다. 18일부터 대학생시위로 된 점을 새로운 방향으로 주목하면서 ‘자유민권운동’으로 명명하였다. 19일자 사설은 비상계엄령의 선포로 “사태가 진압될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데모군중도 “냉정을 회복하여 파괴행위는 없도록 하여 주기를 바”란다는 점을 강조한다.<sup>32)</sup>

중요한 사태가 발생한 4월 19일에 대한 20일자 석간 사설은 『동아일보』의 입장을 잘 보여준다. 사태가 실력발동으로 진정될 때 데모학생들에게 ‘관대’해야 한다는 것, 다른 하나는 자유민권운동이나 민주

30) 『동아일보』 1960.4.19.

31) 『동아일보』, 1960.4.19, 「우주선」.

32) 『동아일보』 1960.4.20, 석간 사설 「시국수습의 방법은 무엇인가」.

투쟁을 곧장 재선거 실시로 연결한다는 점이다. 이미 시위대를 향한 실탄사격의 정황이 자세히 알려진 상황임에도 시위가 조속히 냉정을 찾고 재선거 실시라는 선에서 빠르게 봉합되기를 바라는 입장이다.

3·15 선거를 전후로 한 시기 민주당과 『동아일보』의 반정부 투쟁은 상당한 영향력 특히 따로이 정치적 혁신조직 등을 갖지 못한 지역에서는 대단한 대중적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이 시기의 사설 및 기사들은 열정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마산시위에서 자발적이고 폭발적인 견장을 수 없는 시민의 힘을 목격한 후에는, 반여당투쟁과 분열적인 민주당비판은 계속되지만, 이들 시민운동을 가능한 ‘학생들’의 것으로 가두어서 당대에 짜인 구조 밖으로 어떤 식으로든 확대되는 것을 제어하는 태도를 보였다. 4·19가 일어났을 때 이들이 얼마나 당황했는지를 보여준다.

“4·19사태는 하도 어마어마해서, 장차 행정부나 국회가 이 중대한 문제를 어찌 처리할 것인지 아득한 것 같다”<sup>33)</sup>

마산사건의 배경은 부정선거뿐만 아니라 투표지를 전체 배분하지 않은 것, 공장들에 대한 습격에서 알 수 있듯이 빈부 격차와 정경유착 등 복합적 이유들이 혼재되어 있었다.<sup>34)</sup> 그러나 『동아일보』에서는 두 시위의 주체를 ‘학생들’로 한정하면서 시위의 원인도 부정불법선거 ‘만’으로 축소하고 결국 그 운동의 해결책은 ‘재선거’로 제한하고자 했다. 『동아일보』의 이런 태도는 20일, 21일에도 견지되었다. 4·19는 “**모처럼 모범적이며 순수한** 학생시위였던 고려대학 ‘데모대’로 표현되었다.”<sup>35)</sup> “온갖 더러움에 물들지 않은 순진한 학도들이 불의에 항거

33) 『동아일보』 1960.4.21, 석간 「국가초난국의 타개와 긴박한 민심의 진정을 위하여」.

34) 『동아일보』 1960.3.26, 『동아일보』 1960.4.12.

35) 최태웅, 『동아일보』 1960.4.25, 「국민의사대로」.

하다 흥탄에 쓰러진 이날 그들이 흘린 피의 대가는 반드시 갚어져야 될 것”<sup>36)</sup>으로 보도되었다.

『동아일보』가 4월혁명에 관해 의도와 관점이 보다 확연히 드러나는 기획 기사를 보낸 것은 4월 25일자였다. 이 기사는 『동아일보』가 이 사건이 어떻게 기억되기를 원하는지, 어떤 사건을 길거나 짧게 서술하는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서술하는지 그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이 드러난다. 사건의 역사적 기술에서 구성방식이 드러나는 것이다. 먼저 이 기획 기사 제목은 “4·19의 햇불, 대구학생 ‘데모’로 발화 마침내 운명한 자유당식 민주주의, 고대생은 역사적 선봉”이었다. 중요한 내용을 한 번에 보여주는 기사제목에는 마산시민의 시위는 제외되어 있다. 대구의 ‘학생’시위에서 고‘대생’의 시위로 자유당에 저항한 시위를 핵심줄거리로 구성된다.

그것은 지금은 옛날의 추억으로 살아있지 대구의 학생‘데모’에 서부터 불꽃이 붙었던 것이다. 대통령입후보를 잃은 민주당이 허전한 발걸음으로 유세행각에 올라 칙통한 얼굴로 야당도시 대구에 도착하여 “야 동포야 들어보라”고 외치는 날이었다. 역사적인 2월 28일 — 이날이 바로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자유당은 학교에 압력을 넣어 야당연설을 학생들이 듣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일요등교를 시킨 것이다 … 이후 3월 5일 서울에서 약1천명이 대구학생의 뒤를 따랐다. 3월 8일 대전에서 대전고교생 1천명이 3월 10일 대전에서 대전상고생 3백명이 3월 10일 충주에서 충주고교생 3백명이 역시 3월 10일 수원에서 수원농고생 3백명이 3월 12일 부산에서 해동고교생 130명이 3월 12일(중략) 이렇게 약 반달동안 언 듯 따져도 무려 6,7백여명의 학생이 매일같이 아우성친 것이다. 그러다가 드디어 3월 15일이 왔다. 한국의 남단인 조고만한 향도 마산에서 필경은 피의 향쟁이 전개되고 만 것이다. “부정

36) 오화섭, 『동아일보』 1960.4.25, 「피의 대가는 온다」.

선거를 물리치라!” “학원의 자유를 달라”라고 외치고 일어난 마산의 학생 및 시민들에게 경찰은 실탄으로 제지하기에 이르러 이 고장에서 처음으로 칠명 이상의 피살자가 생긴 것이다 … 다음 경찰은 이들에게 무지무지한 고문으로 보복하였고 또 이들에 공산누명까지 씌우려고 하였던 것이다. 이에 떨어진 마산시민은 위축되어 꼼작 못하고 있었으나 그 외의 고장에서는 마산사태를 책임지라고 외치고 나온 것이다 … 마산시민은 또다시 봉기하고 만 것이다. 이 여파는 결국 서울을 울려 4월 18일 고려대학 전교학생을 분격시키고 만 것이다. 실로 대학 ‘데모’의 횃불을 들고 일어난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역사를 새로운 방향으로 인도한 것<sup>37)</sup>

기사의 내용에서 학생시위에 대해서는 시위의 날짜와 참가 학생 수까지 적시하지만 마산시위는 사망자의 숫자만이 나오며 시위참가자의 구호까지는 나오지만 시위참가 시민들의 숫자는 나오지 않는다. 시위에 참가한 숫자로도 그 주체의 정체가 드러나지 않고 사망자만 나오는 마산 시위는 수동적이며 희생자적인 뉘앙스를 주게 된다. 반면 고대 학생은 “전교학생”이 분격했다고 하여 주체세력의 인원수가 정확히 표기된다. 주체를 능동적이고 명확히 표현해준다. 이 기사의 내러티브는 삼단계의 극적 계기들로 구성된다. 선구적인 대구 등 ‘학생’ 시위와, 누명과 고문에 “위축되어 꼼작 못하고 있었”던 희생자 마산 시민, 이를 구원하고 “인도”한 서울 ‘고대 학생’ 시위라고 하는, 선구자-희생자-구원자라고 하는 구성이다.<sup>38)</sup> “거룩한 애국운동”의 ‘주체’는 “학생”이 되며 지역의 기층민은 구원의 ‘대상’이 된다.

거의 무의식적이라고 할 만한 이러한 내러티브 구성은 ‘학생들’이 정

37) 『동아일보』 1960.4.25, 석간 「4.19의 횃불」.

38) 이러한 선구자 — 희생자 — 구원자의 내러티브는 고대신화와 각종 설화들에 보편적으로 쓰인 일종의 영웅 신화의 서사구조다. 영웅 탄생 신화의 구조에 관해서는 조철수(2003), 『수메르신화』, 서해문집 참조.

치적 권력 의도로부터 순수하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다른 한편에서는 혁명직후 이 혁명의 주체세력들을 정치 권력문제와 정치적 행동에 나서지 않도록 설득하기 용이한 위치에 머물 수 있게 한다. 다시 말해 그들이 “다음 정권을 담당할 준비가 되어있는”이라고 호명했던 민주당 등이 권력을 가져올 세력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서사구조는 AP기자가 쓴 4·19 기사, “AP기자가 본 그동안의 정경, 김주열군과 4·19, 전국시위의 폭발점, 잔인한 경찰행동을 규탄”이라는 기사와 강조점 등에서 차이를 보인다. 제목에서부터 전국시위의 시발점을 마산사건과 연결 짓고 있다.<sup>39)</sup>

#### 2.4. 4·26 — ‘비상입법회의’는 혁명정부인가 무정부상태인가?

4·19 이후 마산에서는 일반시민들의 시위가 이어졌다. 4월 24일에 흰 두루마기로 단장한 오십 세 이상 200여명 마산애국노인회 회원들이 “책임지고 물러가라 가라치울 때는 왔다”는 구호를 외쳤고 오만 군중이 이에 합류하였다. 교통은 완전히 마비되고 마산은 한때 삼 만명의 시민이 마산거리를 뒤덮었다.<sup>40)</sup> 『동아일보』는 “그들 사복경찰관 중에는 현금 만환을 내놓고 이걸로 약주나 사잡수시고 데모는 그만두십시요하며 사정사정하는 장면도 있었다”고 보도했다.<sup>41)</sup> 4월 25일에는 50 세 이상 할머니 약 300명이 ‘죽은 학생책임지고 이대통령 물러가라’ ‘총 맞아죽은 학생원한이나 풀어주소’ 등의 현수막을 들고 행진하였고 이 마산시위는 5만 군중으로 보도되었다.<sup>42)</sup> 노인과 할머니들의 주도로 시

39) 『동아일보』 1960.4.26, 「AP기자가 본 그동안의 정경, 김주열군과 4·19, 전국시위의 폭발점; 언어 구성을 통해 하나의 신화를 만들어내는 이론적 논의에 관해서는 롤랑 바르트(1997), 『현대의 신화』, 동문선 참조.

40) 『동아일보』 1960.4.25, 「마산서 노인데모」.

41) 『동아일보』 1960.4.25, 석간 「순경들이 술값 주며 호소 마산노인들 ‘데모’말라고」.

작된 3차 마산시위는 최소 주민의 5분의 1이 참가한 것이다.<sup>43)</sup> 지역에서 일어난 자발적인 시민들의 대통령 하야 시위는 “경찰에게 술값을 받”는 시위로 묘사되며 사회면 3면에 2단기사로 실렸지만, 같은 날 서울지역 교수 시위는 1면의 전면 헤드라인 기사가 되었다.

서울에서는 25일부터 26일 새벽까지 258명의 서울시내 각 대학교수가 서울대학교 교수회관에서 시국선언을 하고, 대학을 출발하여 종로-을지로입구-미국대사관-국회의사당까지 행진하였다. 그리고 4월 26일 데모대가 국회 앞으로 몰려들었다. 2시 개의를 앞둔 국회의사당 방청석에까지 데모대가 밀려들어갔다. 그러나 이철승은 “우리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니 다먹은 밥에 코빠치지 말고 선을 넘지말고 질서를 유지해야한다”는 무마연설을 하였고 데모대는 해산하기 시작했으며, 고려대학교 중앙대학교 학생들의 호소에 따라 국회방청석에 몰려든 시민들이 모두 나가게 되었다.<sup>44)</sup> 의사당 앞 정문 및 복도 등을 학생자치대가 경비하는 가운데 개이가 되었고, 대학생수습반이 의사당입구와 복도 경비를 섰다. 대학생수습대가 없었다면 국회는 개원조차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런데 시민들이 국회의사당까지 점령했으나 기존 국회의원들이 ‘개헌후 국회해산’이라는 현상유지책으로 의결하면서 4월혁명을 봉합한 다음날인 27일 이를 번복해야한다는 주목할 만한 발언이 있었다. 27일 민주당 정책위의장이었던 주요한은 “현행 헌법의 기능을 정지시키고 이번의 ‘데모’에 참가했던 학생대표, 교수단대표, 변호사 대표, 신문편집인협회 대표, 공명선거추진위대표, 비자유당계 정당대표 등 약 백 명으로 비상입법회의를 구성하고 거기서 과도내각을 구성, 정부통령선거를 실시해야된다”, “지금은 혁명상태니까 헌법 기능을 정지해서 국회

42) 『동아일보』 1960.4.26.

43) 이은진(2004), 앞의 책.

44) 『동아일보』 1960.4.27, 석간 「정계스몹」.

를 즉각 해산한 다음 ‘비상입법회의’를 만들어야 된다”고 주장했다.<sup>45)</sup> 혁명세력으로 구성된 ‘비상입법회의’를 만들고 단시일 내에 내각책임제 개헌안을 기초하여 통과시키고 신헌법에 따라 정부를 조직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이에 대해 『경향신문』은 복간된 후 최초의 사설인 4월 28일자 사설에서 주요한 의원의 발언에 대한 사실을 실었다.

이 구상은 곧 헌법을 정지하고 혁명정부를 수립하자는 결론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러나 이번 사일구 반독재혁명이 어디까지나 합법적인 평화시위로 출발했고 또한 지금도 어디까지나 질서 있는 사후수습을 지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의거 학생들이 ‘이승만정부 물러나고 정부통선거 다시하자’고 외쳤지만 그러나 이대통령이 정권을 포기하는 형식이 역시 법의 질서에 따랐고 그래서 또한 법의 질서에 따라 정부통령선거를 다시 하는 것이 당연한 순서요 지혜로운 방법이다. (중략) **불란서 제오공화국도 혁명에는 특림이 없지만 역시 지혜로운 국민이기에 합헌적 해결에 성공하지 않았던가.** (중략) 비상입법회의라는 새로운 권력기관이 생겨가지고 국민의 수입도 없이 개헌을 하고 정부를 세운다는 것은 대한민국이 산실에서 진통한 연혁을 저버리는 처사 ... 혁명정부가 유엔의 승인을 받아야하고 그 회원국의 승인을 얻어야하며 이는 **극히 위험**<sup>46)</sup>

『경향신문』이 주요한의 비상입법회의안을 ‘혁명정부’안이라고 비판하면서 모델로 끌어들인 예는 1958년 드골의 제5공화국으로 이들은 알제리전쟁으로 불안해진 프랑스국민이 제2차 대전 직후 은퇴한 강력한 프랑스를 주장했던 ‘드골장군’을 다시 불러들여 국민투표를 통해

45) 『경향신문』 1960.4.28; 『조선일보』 1960.4.28, 「국회해산 후 재선거실시」; 『동아일보』 1960.4.28, 「정계스납」.

46) 『경향신문』 1960.4.28, 「사설, 비상입법회의는 존립의 근거가 없다」.

서 입법부를 약화시키고 강력한 대통령중심제를 실현했던 사건이다. 『경향신문』 사설은 사월혁명이후의 사태가 비합법적인 상황으로 사태가 확대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이 불안을 잠재울 강력한 지도자로 군인출신 드골을 끌어들이던 프랑스의 예까지 나갈 정도의 지극한 불안과 두려움을 보여준다.

『동아일보』는 민주당 정책위의장 주요한의 기존 국회 해산 및 ‘비상입법회의’안을 “무정부상태”를 초래하는 제안으로 맹비난하면서 칼럼에서 스케치하듯 다룰 뿐이었다. “학생들이 민주제단에 거룩한 ‘피’를 흘린 것이 이 나라의 헌법을 정지시키고 국가를 무정부상태로 몰아넣어 암흑화시키는 데에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착각을 하신다면 위험천만”이라는 전언을 실었다.<sup>47)</sup> ‘비상입법회의’안처럼 혁명세력을 직접 정치에 참여시키는 것은 ‘무정부상태’를 야기할 일고도 고려할 가치가 없다는 듯 기사화 자체를 하지 않았다.

반면 『조선일보』는 이들 매체 중 유일하게 정식기사로 비교적 비중 있게 그 내용을 자세히 기사화하면서 이 발언이 “민주당 신 구파의원 간의 새로운 분류를 재연시키게 되었다”고 논평했다. 이들 세 언론매체의 혁명 후 권력재편에 관한 논평은 4월혁명에 대한 이들의 정치적 입장을 보여준다. 『동아일보』가 학생 및 일부 시민 등 혁명참가세력들이 정치에 참가하는 것을 무정부상태라 하여 적극적으로 제어하고자 했다면, 『경향신문』은 기존 법의 테두리가 허물어질 것에 대한 두려움을 적극적으로 표현했고, 『조선일보』는 한 발 뒤에서 민주당 내 신구파의 분란이 생길 것이라면서 관망하는 자세를 취하며 혁명의 문제가 아닌 민주당내 싸움으로 한계 짓고 있었다.

또한 『동아일보』는 비상입법회의를 정식기사로 다루지 않은 반면, 다수의 지면을 ‘대학생수습대책반’의 활동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 ‘대

47) 『동아일보』 1960.4.28, 「정계스캔, 무정부상태는 피의 보답아니다」.

학생수습대책반'은 자유당의원을 포함한 기존 국회의 본회의 경비를 서고 군부에 의해서 각 경찰서에 배치되기까지 하며, 자유-민주당체제를 비난하는 운동단체를 경찰에 고발하여 체포되도록 하는데 이 정황을 자세히 보도한다.<sup>48)</sup> 이 과정에서 '대학생'들이 주된 혁명의 주체이며 희생자들이었기 때문에, 국회의사당에 진입했던 시민들은 이들 경비 대학생들이 자신들이 대학생들이라고 밝히고 저지했을 때 모두의 사당 밖으로 나갔고, 본회의는 국회의원들에 의해서 '만' 진행되었다. 『동아일보』는 사설을 통해 대학생들이 질서 유지와 '치안'을 담당해 줄 것 그리고 언론사도 보호해 줄 것을 호소하고 격려했다. 혁명의 주체를 시민과 민중이 아닌, 학생들 그 중에서도 순수하고 계몽된 '대학생들'로 한정함으로써 재선거를 통한 정권교체 — 민주당 등 자유주의세력의 집권이라고 하는 기획으로 혁명을 제한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반독재 자유주의 언론으로서 위상으로 대학생 및 중간층 시민들에 대한 헤게모니적 영향력도 확장할 수 있었을 것이다.

사월혁명 이후 뒤늦게 복간된 『경향신문』은 주요한의원의 이 '비상입법회의'를 복간 후 첫 사설로 비중 있게 다루었지만, 이를 '혁명정부'를 세우는 안이라고 비판하였다. 비상입법회의는 얼마든지 그 역할의 한계를 정할 수 있으며 혁명 주도세력이 참가하여 목소리를 내고 기존 국회를 어느 정도 인정할지 등에 관해 논의할 수 있었을 지도 모른다. 혹은 이 두 신문이 사설에서 한 그 논의를 이 비상입법회의든 어떤 자리에서든 혁명의 주도세력의 요구사항을 전할 기회가 있었어야 할 것이다. 주요한의 '비상입법회의'는 당시 자유주의가 제출할 수 있었던 가장 급진적인 안이었을 것이다.

혁명을 통해 대통령이 해야한 상태에서 자유당계가 그대로 있는 국회에서 의결에 따라 개헌을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

48) 『동아일보』 1960.4.27, 석간; 『동아일보』 1960.4.28.

었다. 실제로 허정과도정부 수반은 27일 개헌-대통령선거-국무총리 임명안을 선언했다. 자세한 것은 국회와 상의한다는 단서를 덧붙이기는 하였지만, 허정에게 이 역할을 맡기는 것까지 이승만의 지시사항에 포함되어 있었고, 이 방안대로 혁명이후의 과정은 전개되었다. 이 안에 따라 7·29 총선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국회에도 자유당의원들이 존속하였고, 지방에서는 더욱이 자유당계 인사들이 지방의 경제적 이권세력들 및 경찰 지방관료들과 결탁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대로 출마하게 된다. 특히 마산지역에서는 자유당계 인사들의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저지하려고 하는 시위와 학생들의 처절한 단식투쟁이 이어졌다.<sup>49)</sup> 출마를 저지하지 못했던 삼천포지역에서는 자유당계 인사 투표용지를 불태우는 사건까지 일어났다. 민주당계는 총선 전후과정에서 제1공화국의 부정축재자들, 재벌들로부터 정치자금을 수수했음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사월혁명이후 ‘비상입법회의’와 같은 논의가 전격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구정치구조 및 자유-민주당의 정치세력들이 같은 구조 속에서 온존한 상태에서 사월혁명에서 제기된 문제들이 — 부정선거를 막는 차원에서부터 대의제도 자체의 계급적 차별이 완화되는 차원의 문제까지 포함해서 — 결실을 맺기 어려웠다는 점을 보여준다. 혁명의 시작까지는 자유주의세력의 운동과 노력이 따르지만, 혁명이 시작된 이후에는 자유주의적 틀 내에서 — 기존의 법적 틀 안으로 운동을 고사시키려는 자유주의세력의 배가된 노력이 진행되었다.

49) 『경향신문』 1960.7.13, 「대거출마에 반발심 격화일로 반혁명세력규탄 마산서 대학생 연좌데모」; 경향신문 7.20, 「시민투위를 구성」; 『경향신문』 1960.7.24, 「마산 투위 실력행사키로」; 『동아일보』 1960.7.20, 「잡아넣라고 아우성, 이용범씨 규탄 데모 창원군 도처에 파급 합세하는 군민격중, 단식화자도」.

### 3. 혁명의 성격 짓기 — 『사상계』의 지식인혁명/정신혁명

#### 3.1. 자유민권운동

4월까지 『사상계』는 3·15 마산사건을 ‘학생테모사건’으로 명명하다가 이후 ‘사월혁명’으로 부르는데, 여기에서 운동의 주체세력과 관련된 장준하의 생각이 편집장으로서 쓴 「권두언」에 자세히 나온다.

‘일당독재의 실을 확연히 노출시켰고 **일부 악질지도층은 악랄한 공산당의 수법**으로 백성의 수족을 푹푹 묶어 버리려 들고 있었다.’ 한편 ‘민권운동을 자부하는 야당은 집권당과 행정부의 비를 들어 인기전술로 일시 국민의 마음을 모으려는 데는 힘쓰나, 민족의 장래를 위한 애국정성의 결여에서인지 민권운동이라기보다는 나만이 정권을 잡아야 한다는 듯한 혹은 싸움으로 자당내의 통일조차 유지치 못하는 경향을 보여 주어 **국민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있다.**

‘나라의 正氣를 외치고 不正과 不義에 항쟁하려는 純情無垢한 어린 학도들의 뒷통수를 방망이로 후려갈기거나 어린 가슴에 총뿔리를 대어 피를 흘리게 하는 따위 야만적 행동은 부정에 항거하는 군중의 시위를 막겠다고 7,80명의 인명을 살상케 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이요. **더욱 가슴을 아프게 한 것은** 부정과 불의에 항쟁은 못할망정 오히려 야합하여 춤춘 일부 종교가, 작가, 예술가, 교육가, 학자들의 醜態다. 선거통에 한몫 보자고 敎友의 수를 팔아가면서 쪽지를 들고 돌아다니는 목사 장로 따위의 축복을 바라고 그가 높이 든 팔 아래 머리를 숙이고 ‘아-멘’으로 화창하는 신도들에게 신의 저주가 임할 것이다.<sup>50)</sup>

50) 장준하(1960), 「권두언 창간 7주년 기념호를 내면서」, 『사상계』 4월호.

이 권두언에는 지도층, 야당, 공무원, 학도들 및 종교가, 작가, 예술가, 교육가, 학자 등 지식인층, 그리고 신도들이라는 사회집단이 등장한다. 여기에서 일부 악질지도층은 ‘악랄한’ 공산당의 수법으로 백성의 수족을 묶어 버리는 정신적인 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광적으로 날뛰는 민주공화국을 망치는 이들이다. 그 다음 비판의 대상은 불법선거를 수행한 공무원들인데, 이들은 “불법을 감행하라는 명령에까지 그렇게 성실하게 임하는 관원들의 행위에 개탄을 마지 않는다”다 하여 이들의 행동은 “개탄”의 대상이다.<sup>51)</sup> 그러나 민주당과 성직자, 교육자, 예술가, 학자들의 추태는 “가슴 아픈 행위”이다. 장준하로서는 그 심리적 거리 및 그에 따른 책임감이 가장 가까운 직업군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일차적으로는 민주당 지지자이며 더 깊게는 성직자, 교육자, 예술가, 학자군에 가장 가까운 책임감과 거리를 느끼는 군으로 스스로 사회심리적 위치를 잡고 있다. 역설적으로 이러한 화이트 지식계급군에게 미혹된 일반 민중 신도들은 “신의 저주”를 받을 대상이다. 기본적인 합리성이 부족한 민중에 대한 화이트칼라의 자유주의 지식인다운 엘리트주의적 면이 있었다고 보인다.<sup>52)</sup> 물론 장준하는 그 다음 글에서 예술가, 작가, 교육가 등을 비판하기는 하지만 상대적으로 그들의 직업을 그만두라는 정도에 머물고 있으며, 학자들에게만 “반역자”라는 보다 엄격한 분노를 표현하고 있다.

지조없는 예술가들이여 너의 演技를 불사르라. 너의 연기는 독부의 미소피운 독약섞인 술잔이다. 부정에 반항할 줄 모르는 작가들이여 너의 붓을 꺾으라. 너희들에게 더 바랄 것이 없노라. 양의 가죽을 쓴 이리떼같은 교육가들이여 토필을 던지고 관헌의 제복으로 갈아 입거나 정당인의 탈을 쓰고 나서라. 너희들에게는

51) 장준하, 위의 글, pp. 18-19.

52) 장준하, 위의 글, p. 19.

일제시의 노예근성이 뿌리깊이 서리어 있느니라. 지식을 팔아 영달을 꿈꾸는 학자들이여 진리의 곡성은 너희들에게 반역자란 낙인을 찍으리라.”<sup>53)</sup>

장준하가 이들과 가장 거리가 있다고 판단하며 기대하는 계층은 “純情無垢한 학도들”이다. 3·15 시위에서 앞장 선 것은 학생들이었지만, 1000명에 가까운 시민들, 다양한 계층이 함께 했고 농부 등이 총탄을 맞기도 했다는 사실이 이미 같은 호 『사상계』기사 란에 자세히 게재되어 있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러한 담론에는 장준하의 정치심리적인 선호도가 개입되어 있다는 점을 간과하기 어렵다. 부정선거에 항거한 시민들은 아직 “민도”가 낮은 “백성”들로서 주체라기보다는 여전히 “계몽”의 대상이며, “학도”들은 교양 있는 중간계급의 맨 하위 후보군으로서 도덕적으로 “무구(더러움이 없는)”하며 순수한 계층으로 항거의 주체가 될 만한 존재인 것이다. 그의 종교적이며 도덕주의적이고 중간계급 지식인의 엘리트주의적인 면이 이러한 3·15 시위의 주체들에 대한 전유의 심리적 배경으로 일조했다고 할 것이다.

동시에 ‘백성’이라든가 ‘민권’이라는 표현이 동아일보 기사 및 칼럼에서 보다 더 많이 자주 사용된다.

오직 백성의 힘으로 정권을 교체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이 나라 이 백성이 체득케 하기 위하여서였고 이대통령의 총명이 이에 미쳐 국민의 의사에는 누구나 복종한다는 전례를 만들어 국부로서의 만대의 승앙을 받아 주기를 바라는 간곡한 마음에서였다. 이제 우리는 또다시 오직 후진에게 희망을 걸고 이 나라의 민도 향상을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겠노라. 온 국민이 올바른 견해를 가질 수 있도록 계몽의 역군이 되겠노라. 이 나라에 민권이 확립될 때까지 곳곳이 싸우겠노라.<sup>54)</sup>

53) 장준하(1960), 「권두언 창간 7주년 기념호를 내면서」, 『사상계』 4월호.

**한국의 민권운동**도 이제 피를 흘리기 시작하였으니 만방의 자유민들 앞에 머리를 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천인이 공노할 관권의 야만적 횡포아래서도 그저 울고만 있는 **유약한 백성**이란 낙인은 우리에게 다시는 찍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에서 민주주의를 바란다는 것은 쓰레기통 속에서 장미가 피기를 기다림 같다’던 망언도 이제 취소가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입으로 ‘자유’를 논할 자격을 얻었으며 행동으로 **민권을 과시한 실적**을 남겼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삼일오 총선거를 중심으로 전국 각지에서, 특히 마산지구에서 무참히도 순사한 **민권의 사도**, 정의와 자유의 용사들의 젊은 영혼 앞에 두 손을 모아 그 명복을 비는 바입니다.<sup>55)</sup>

장준하뿐만 아니라 『사상계』 편집위원인 역사학자 김성식도 “자유와 **民權**을 위한 학생들의 투쟁운동”이라 하여 사월혁명을 ‘민권운동’으로 보고 있다.<sup>56)</sup>

이들은 왜 인권이나 인간의 권리 및 자유 등의 표현 대신에 굳이 ‘민권’, ‘민권운동’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사용했을까. 민권은 개개인 인간의 권리가 아니라 집단주체인 민의 권리운동이다. 이 표현은 동아시아에서 19세기말 20세기에 사용한 용어이고 특히 대한제국기 독립협회 등의 운동에 사용했다. 개인이라고 하는 고유한 존재의 인간의 권리와 자유보다는 집단적 민의 자유와 기본 권리 운동이며 주로 중간계급인 신지식인층들이 이 운동을 담당했다. 중국에서는 향신층 출신의 변법세력들이 1898년경 주도했고, 일본에서는 1890년대 자유민권운동도 지식층의 운동이었다. 1898년 독립협회의 민권운동도 중인층 및 일부 양반출신들이 주도한 운동이었다. 중국의 경우는 민주주의라는

54) 장준하(1960), 앞의 글.

55) 장준하(1960), 「민권전선의 용사들이여 편히 쉬시라」, 『사상계』 5월호(1960년 4월 10일 발행).

56) 金成植(1960), 「學生과 自由民權運動」, 『사상계』 6월호, pp. 66-67.

표현조차 이들 향신층의 정치적 진출 및 권력신장을 주장한 것이었고 자신들이 진출한 의회 등의 기구를 통해 민의 자유 및 권리를 신장하고자 한 운동이었다.<sup>57)</sup> 이러한 관점에는 민중은 여전히 계몽이 필요한 존재들이라는 시각, 18세기 로크나 20세기 초 우드로 윌슨이 필리핀 등의 식민지민에게 취했던 시각이나 루스벨트의 신탁통치안에 스며있는 탈식민지민에게 취했던 관점이기도 하다.<sup>58)</sup> 장준하가 4·19를 굳이 민권전선, 민권운동으로 표현했던 것은 19세기말 대한제국기의 민권운동이 식민지시대를 거쳐 단절되었다가 다시 정부권력으로부터 인권의 자유라는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었던 한국의 역사적 상황이라는 점이 작용하고 있었다. 여기에는 계몽기의 자유주의 지식인, 또는 식민지민에 대해 백인자유주의자들이 취했던 계몽주의적 엘리트주의적 시각이 작동하기 쉬운 역사적 상황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다른 한편으로 동아시아 자유주의가 보여주는바 개인의 천부인권과 같은 인간 개인으로서 권리와 자유보다는 집단적인 민, 민족의 자유 및 권리를 강조하는 집단주의적 특성도 간과할 수 없다. *Natural right*를 천부인권이라고 번역했던 일본에서는 19세기말 자유민권운동이 처절히 진압된 뒤 대정데모크라시의 시기를 제외하고는 아직까지 자유주의 정치세력이 미미하며 중국도 1920년대 신문화운동기의 개인주의시대를 제외하고 자유주의세력이 대만에서 살아남았을 뿐이다.<sup>59)</sup>

이러한 민권운동이라는 표현은 다른 한편으로 자유주의 지식인이 자신들을 ‘교육자’ 및 계몽자로서 역할 했으며, 혁명이후로도 여전히 교육

57) 양일모(2017), 「근대 중국의 민주 개념」, 『중국지식네트워크』, 국민대학교 중국인문사회연구소 9(9), pp. 53-83.

58) 윤상현(2016), 「주권, 세계 구상, 자유주의적 국제주의의 계보」, 『개념과 소통』 17, 한림과학원; 윤상현(2013), 「『사상계』의 근대 국민 주체 형성 기획 — 자유주의적 민족주의의 담론을 중심으로 —」, 『개념과 소통』 11, 한림과학원.

59) 진관타오(2011), 『관념사란 무엇인가 2 관념의 변천과 용어』, 푸른역사; 윤상현(2019a), 앞의 글.

자이자 계몽자로서 일정정도 역할을 할 공간이 남아 있을 수 있게 한다.

### 3.2. 지식인혁명/정신혁명

『사상계』는 『동아일보』와 달리 사월혁명에서 지식인들의 역할을 유난히 강조한다. 이 혁명의 기반은 교수 교사들이며, 이를 촉진해준 것은 언론인, 그리고 여기에 희생되었으며 주도한 세력은 학생들이다. 혁명세력은 혁신세력이나 여타 정당을 지지한 바 없다는 주장은 정치 정당과 연결되지 않은 지식인의 혁명이라는 정의로 이어진다.

사월혁명은 자유와 민권의 선각자인 이 땅의 지식인들의 손에 의한 혁명이다. 그 기반을 닦아온 것은 정객들 보다는 양심 있는 이 나라의 교수들과 교사들을 포함한 지식인들이오 이에 박차를 가해준 것은 신문이나 잡지들을 포함한 매스컴의 힘이오, 그 불길이 되어 탄 것은 가장 감수성이 강하고 정의감이 가장 두터운 학도들이었음이 분명하다. 혁명군중의 입에서 어떤 정당의 만세를 외치는 구호를 찾아볼 수 없었던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지금 혁신을 부르짖는 어떠한 정치인에게도 깃발을 들어 달라고 하지 않았다.<sup>60)</sup>

이 권두언은 6월호로 1960년 5월 20일 발행되었으니, 4·26 이후 이미 대략 한 달 정도 경과된 이후이다. 『동아일보』가 사월혁명에서 민주당의 역할을 부각시키고 연관성을 강조했다면 『사상계』는 사월혁명을 교육계, 언론계가 이끌고 학생들이 그에 따라 일어난 것으로 서술한다는 점이 다르다. 그러나 혁명의 주도세력과 관련된 엘리트주의는 『동아일보』와 『사상계』에 유사한 점이 있으며 이는 대중에 대한 불신 등과 관련되어 있다.

60) 장준하(1960), 「권두언, 또 다시 우리의 향방을 闡明하면서」, 『사상계』 6월호.

이와 반대로 일반 대중은 문맹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과거의 인습과 도덕에 얽매어 위사람을 향하여 투쟁한다는 자체가 정당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 국민의 대다수가 그들에 의하여 구성되었다는 의식도 없고, 다만 남에 의하여 다스림을 받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다. 그러니까 자유와 민권이 무엇인지 자각조차 할 수 없는 형편이요, 그 때문에 어떠한 혁신운동에도 그 반응은 지극히 미약한 것이었다. 그들이 어떠한 혁명운동에 가담한다 하여도 그것은 그들을 압박하는 현제도를 뒤집어엎는데 있는 것이요, 자유와 민주주의가 무엇이 좋고 나쁜지 아지 못하고 있는 때가 많다. 그러니까 그들도 자유 민권의 담당자는 되지 못한다.<sup>61)</sup>

유럽의 자유주의운동도 시작은 민중의 기본권 요구 운동들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이들의 남다른 대중에 대한 불신과 지식인 엘리트주의 등은 대체로 그들이 한국사회를 후진적으로 인식하고 서구에 대한 환상이라고 할 만큼의 이상화된 서구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과 관련된다.<sup>62)</sup>

혁명 이후 방향을 논하는 문제에서는 그 우선순위가 특징적이다. 1) 지식층이 납득할 수 있는 정책, 2) 자유우방들이 믿을 만한 정책, 3) 국민 생활향상에 전력하는 정책이다. 우선순위에서 국민생활향상이 최우선이 아니라 지식층이 납득할 만한 정책이 우선된다는 점이나 자유우방이 불신하지 않을 만한 정책이 우선순위를 점한다는 것은, 민생을 추구하기는 하지만 방법에 있어서 기존 지식인층이 바라고 자유우방이 바라는 한계를 넘지 말라고 하는 방향성을 드러내고 있다. 프랑스 혁명의 예에서 보이듯이 인간의 권리와 자유를 위한 자발적인 민중의

61) 金成植(1960), 「學生과 自由民權運動」, 『사상계』 6월호, pp. 66-67.

62) “물론 선진각국에서와 같이 정치가 공의에 벗어나지 않고 사회적 불의가 없을 경우 학생들의 정치적 또는 사회적 운동은 일어나지 않는다” ‘후진성을 많이 지닌 국가는 ... 근대정신에 따라 먼저 각성한 학생들에 의하여 민주적 학생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것’ 위의 글, p. 66.

혁명 다음에 권력을 잡은 자유주의세력들은 급진적 민중들과 격렬한 투쟁을 했던 프랑스혁명의 예를 상기한다면, 근대민족국가 초기이며 노동세력보다 농민이 70% 정도 대다수를 점하고 있던 계급적으로 불안정한 시기에 지식인중심의 자유주의세력이 사월혁명을 ‘지식인들의 혁명’으로 ‘지식인들의 영향력을 확대할 방향으로’ 전화시키기를 의도했다고 할 수 있다.

첫째로 이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정책은 이 나라 지식층에게 완전히 납득이 될 수 있는 투명한 정책이어야 하며 그러한 정책만이 수행의 묘를 얻게 될 것이다. 일부 정당이나 정책들의 야욕이 숨어 있는 정책은 앞으로 그 생명을 가지지 못할 것이며 종래의 집권자들에게 **멸시를 당하였던 이 나라 지식층의 준엄한 지탄을 받게 될 것이다.** 둘째로 자유우방들에게 오인과 불신을 받을 만한 요소는 모든 정책면에서 완전히 제거되어야 한다. 우리는 자유민주국가군의 일원임이 뚜렷하다. **이 대오에서 뒤질 수도 없고 탈선도 허용되지 않는다. 오직 우리에게서 이 대열 속에 정렬하고 이 대열 속에서 전진함이 있을 뿐이다.** 사월혁명은 국민의 강렬한 투지와 자유우방의 견결한 지지에서만 이루어진 것이지 어떤 한쪽의 萎縮이라도 있었던들 부정에 계속 항거하는 단결된 국민의 역량이 없다면 수포화했을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는 까닭<sup>63)</sup>

여기서 “집권자들에게 멸시를 당하였던 이 나라 지식층”이란 언술은 장준하 자신이 속한 서북계에 대한 표현이기도 하면서 또한 자신이 속한 지식인 계층의 불안한 위상에 대한 심리적 자의식적 묘사로도 읽힌다.<sup>64)</sup> 이승만 하야 과정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지켜본 자유진영에 대한 의식은 『동아일보』와 『사상계』가 동일한 지점이다. 다만 『동아

63) 장준하(1960), 「권두언, 또 다시 우리의 향방을 闡明하면서」, 『사상계』 6월호.

64) 장준하(1983), 『장준하전집』 1, 사상사 참조.

일보』가 사월혁명이 반미적 요소가 없다는 점을 끊임없이 미국에 알림으로써 대한민국의 탄생으로 자기세력이 지배그룹의 사회 상층세력으로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해주었다는 면에서 유엔 가입과 가입국들의 승인이라는 보다 이해관계에 기초했음을 강조하는 형식을 띠었다면, 『사상계』는 자유진영이라는 군대의 “대오” 속에서 “탈선” 조차 허용되지 않는다고 표현함으로써 우방이 알던 모르던 보라보고 있던 그렇지 않던, 그들에 대한 의존에 강박적일 만큼 자각적이며 자발적이라는 심리적 절박성의 차이는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4월혁명의 향후 과제로 『사상계』는 정신혁명을 강조하는 경향성을 보였다.

이번 혁명의 직접 계기는 부정선거와 마산학살이었지만 그 목표는 반민주, 부패, 독재에 대한 항거였었고 이 목표는 현재에서도 변함이 없는 것. 반민주요소의 배격을 위한, 부패세력의 소탕을 위한, 도제세력의 재등장을 막는, 일대 정신운동이 필요한 것이다 … 정신의 쇄신운동이다 …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정신운동만이 — 개개인의 머리와 가슴속에 부식되는 민주혁신에 대한 신념만이 — 가져오게 될 것이다. 이점 이미 혁명을 수행한 바 있는 학생은 절호의 주체가 될 수 있고 또 되어야 하는 것이다 … 정치정당에서 한걸음 떨어져서 민주, 쇄신을 위한 정신운동을 견지해 나갈 경우 그 힘은 저번 혁명 때보다도 더 큰 위력을 가져올 수 있는 것.<sup>65)</sup>

정당정치와 떨어진 정신운동을 강조하는 이러한 경향은 일제시기 안창호계열의 실력양성운동을 연상시키는 면이 있다. 정신수양을 강조하는 것이 흥사단의 전신인 수양동우회계열의 전통이기도 하며, 이들이 따랐던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정신 및 영혼을 물질보다 강조하고 관념적 성향을 반영하기도 한다. 정치적으로는 제국주의로부터 직접

65) 고병익(1960), 「『혁명』에서 운동으로」, 『사상계』 6월호, p. 119.

적인 저항보다 정신수양과 교육 및 실업양성을 통한 준비론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준비론적 경향은 사회계층적인 측면에서는 아직 안정적인 부르주아계급이나 중산층으로서 재생산기제를 마련하지 못한 소부르주아적 입지점에서 시간적 재정적 성장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심리가 반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기독교적 경향과 사회계층적 입장이 『사상계』의 사월혁명 이후 운동의 과제에서 정치권력의 문제를 소거한 ‘정신혁명’ 주장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sup>66)</sup>

『사상계』의 편집위원 김성식도 후진국에서는 중산계급이 아닌 학생들과 지식인들에 의해서 민주적 학생운동이 일어나게 된다고 하면서 사월혁명이후 정신 혁명의 필요성을 강조한다.<sup>67)</sup> 그는 사월혁명을 오스트리아의 빈혁명과 비교하지만, 빈혁명 당시 학생정부가 수립되어 무려 7개월간 빈을 점령하고 학생정부를 운영한 것에 관련해서는 언급이 없다. 누가 권력을 잡거나 정치적 행동에 관해서도 논구가 없고 도의적 혁명, 정신혁명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안으로 등장한다는 면에서 이는 『사상계』의 한 경향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4. 결론

4월혁명의 주체에 대한 전유는 1950년대 한국 자유주의 세력의 성격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동아일보』는 보수적인 사회질서 유지라

66) 정신혁명과 관련해서는 유명론적 논쟁을 거치지 않았던 한말 자유주의적 전통과도 관련이 있을 것이며 다른 글에서 보다 깊은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전자에 관해서는 윤상현(2019a), 앞의 글 참조.

67) “우리는 지금까지 李朝五百年의 연장된 정치체제를 가졌던 것이나 이제부터 비로소 새로운 민주와 도덕과 양심의 정치체제를 가지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이번 혁명으로 우리는 **정신적 혁명이 절실히 요청되는 것이다.**” 金成植(1960), 앞의 글, p. 71.

는 측면에서 부정선거에 반대하는 시위가 친북한이나 친공산주의 등으로 오독되는 것에 적극 반대했다는 측면에서 ‘오열’이 개재되지 않은 ‘순수한’ 학생들만의 시위이기를 기대했다고 할 수 있다. 선거가 아닌 시위에 의한 정권교체라는 사실에 놀라면서도 사월혁명을 이들 학생들만의 시위로서 한정하고, ‘친미’라는 자유진영체제가 흔들린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것은 『동아일보』계열이 그만큼 상층 부르주아적 위치를 점하고 있었다는 점을 방증한다. 이들은 대구학생시위-마산사건-4·19에서 선구자-희생자-구원자라는 영웅 서사구조를 통해 결국에는 3개월여 동안의 운동에서 ‘대학생’이 이 운동의 영웅이 되도록 했다. 참가수와 기간으로 보면 중고등학생 및 남녀노소 시민들의 몇 달간 진행된 사건이었지만, 마산사태와 비교되는 “모범적이고 순수한” 대학생 중심의 의거로 재생산 되는 것이다.

1950년대 『동아일보』는 정권이 교체된다면 언제든 기득 권력이 될 수 있는 물질 토대가 풍부한 상층 부르주아로서 이들의 자유주의는 영국 보수당의 자유민주주의나 자신들이 보수야당이라고 비판했던 민주당 못지않은 체제 수호라는 보수성을 띠고 있었다. 또한 이들이 주조한 친미적 자유주의, 사적 소유재산권에 대한 철저성 등의 특성들은, 서구의 자유민주주의가 결국 보수 세력의 이데올로기가 되었던 것처럼 현대 한국 자유주의가 기득권력이 되어 보수화되었을 때 그 구성 요소의 기원으로 자리하게 된다. 이질적인 군대에 의한 정부에 대해서는 반정부투쟁세력이었으나 민주화로 군인세력이 물러난 이후에는 이들 구성 요소의 전통을 유지한 보수적 세력으로 위치지어 갔다.

한편 1950년대 자유주의를 이끈 한 그룹이라 할 『사상계』, 『경향신문』, 흥사단계열은 개신교, 천주교 등 일제시기 이래의 종교적이고 도덕주의적 성향을 띠고 있었으며, 막벌이꾼, 농부, 잡역부들보다는 중간계급 후보군, 그들 중에서도 어리므로 도덕적 흠결이 덜할 수 있는 청년 학생들을 민권운동, 자유와 권리를 위한 저항운동의 ‘주체’로 자

리매김하고자 했다. 그 과정에서 특히 이 청년 학생들을 교육할 교육자의 역할로서 지식인의 위상을 부각시켰으며, 사월혁명의 향후 과제로서 정신혁명을 강조함으로써 청년 학생들을 정신적으로 이끌고 계몽하며 지도할 지식인의 역할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지식인혁명’이라는 틀을 구성하고자 했다. 현대문화의 불안과 신경증을 넘어서 소부르주아적인 불안정한 위치에 있었던 지식인들은 ‘실력양성론’과 같은 준비론을 통해서 불안한 지식계급이 성장하고 안정화할만한 물적 토대와 시간적 경제적 준비기간의 확대를 구하거나, 관념적이고 종교적인 지적 체계들로 다른 계급들과 구별 지으며 사회 내에서 위상의 안정화를 이룬 중간계급의 중하층으로서 신분상승과 하락이 일어날 수 있는 정치경제적 입장으로 인한 불안함을 정서적 특징으로 한다.<sup>68)</sup> 자의식적인 지식인으로서 흥사단계열의 지식인들은 이러한 지적 전통을 한 축으로 하고, 1950년대 생산관계에서 탈거된 월남지식인들이라고 하는 더욱 불안한 소부르주아적인 위상 속에서 사월혁명의 폭발성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는 있었지만 ‘정신혁명’이라고 하는 또 다른 준비론적인 물러섬을 주장했다.

사월혁명기 자유주의 중 상대적으로 가장 급진적이라 할 수 있었던 주요한의 ‘비상입법회의’는 혁명을 주도했던 학생, 지식인 등으로 비상입법기관을 구성하자는 안이었지만 당시의 계급구성 자체가 뒤 흔들릴 것을 원치 않았던 그들 내부에서 묵살되었으며, 향후의 정치적 구도를 바꿀 수도 있었던 혁명 직후의 권력문제를 둘러싼 이 안에 대한 각 정치세력들의 논란은 그들의 정치경제적 입지점을 정확히 보여 주었다.

롤랑 바르트에 의하면, 현대의 신화는 어떤 동기에 의해서 사람들에게 의해 만들어지지만 그 신화를 듣고 이용하는 사람은 ‘신화가 이성화

68) 부르주아의 심리적 특성에 관해서는 피터 게이, 고유경 역(2005), 『부르주아전, 문화의 프로이트, 슈니츨러의 삶을 통해본 부르주아계급의 전기』, 서해역사 참조.

되어 매우 자연스러운 이야기'로 받아들이는데, 이것이 신화의 '숨은 힘'이다. 현대의 신화는 '지배적인 가치나 태도를 자연스럽게 정상적이고 당연하고 영원하며 자명한 상식처럼' 만들어 '세계를 고정'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냉전시기 지역민들의 수개월에 걸친 저항과 죽음에는 가난한 자들에게는 투표용지조차 주지 않았던, 시위 참가만으로 끌려가 고문을 당했던 권력이 없는 자들의 질긴 저항이 뒤엉켜있었다. '계몽되고 순수한 대학생주도의 자유민주주의의거'라는 단면적 신화는, 기성 계급구조의 세계를 고정시키고 '반공'을 그 시대의 더욱더 자명한 신화와 종교로 만들었다.

## 참고문헌

### 【자 료】

- 『동아일보』, 『조선일보』, 『경향신문』.  
思想界社, 『思想界』, 1953-1970.  
학민사편집실편, 『사월혁명자료집, 四一九의 民衆史』, 학민사.  
일월서각, 『四一九革命論II』, 일월서각.  
張俊河, 1983, 『張俊河전집』1-3, 사상사.

### 【논 저】

- 김상태(2002), 『근현대 평안도 출신 사회지도층 연구』, 서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문지영(2005), 「한국의 근대국가 형성과 자유주의」, 『한국정치학회보』 39(1).  
양일모(2017), 「근대 중국의 민주 개념」, 『중국지식네트워크』, 국민대학교 중국인문사회연구소 9(9).  
오제연(2014), 「4월혁명의 기억에서 사라진 사람들」, 『역사비평』 106, 역사문제연구소.  
윤상현(2019a), 「관념사로 본 1910년대 ‘개인’ 개념의 수용 양상 — 유명론적 전환과 개체로서 ‘개인’ 인식」, 『인문논총』 76(2), 서울대 인문학연구원.  
\_\_\_\_\_(2019b), 「『思想界』의 시기적 변화와 ‘개인’ 개념의 양상」, 『인문논총』 49, 경남대 인문과학연구소.  
\_\_\_\_\_(2016), 「주권, 세계 구상, 자유주의적 국제주의의 계보」, 『개념과 소통』, 17, 한림과학원.  
\_\_\_\_\_(2013), 「『사상계』의 근대 국민 주체 형성 기획 — 자유주의적 민족주의의 담론을 중심으로 —」, 『개념과 소통』 11, 한림과학원.  
이상록(2011), 「경제제일주의의 사회적 구성과 ‘생산적 주체’ 만들기 — 4·19~5·16시기 혁명의 전유를 둘러싼 경합과 전략들」, 『역사문제연구』 15, 역사문제연구소.  
이은진(2004), 『근대마산』, 경남대학교 출판부.  
조철수(2003), 『수메르신화』, 서해문집.

- 조한상(2015), 「자유주의, 민주주의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원광법학』 31,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 홍석률(2004), 「1960년대 한국 민족주의의 분화」, 『1960년대 한국의 근대화 와 지식인』, 선인.
- Shimokawa, Ayana (2014), 「4·19 해석의 재해석: 『사상계』 지식인이 만들어낸 4·19 민주혁명」,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롤랑 바르트(1997), 『현대의 신화』, 동문선.
- 앤서니 아블라스터, 조기제 역(2007), 『서구 자유주의의 융성과 쇠퇴』, 나남.
- 진관타오·류칭핑, 양일모 외 역(2011), 『관념사란 무엇인가 1 이론과 방법』, 푸른역사.
- \_\_\_\_\_ (2011), 『관념사란 무엇인가 2 관념의 변천과 용어』, 푸른역사.
- 피터 게이, 교유경 역(2005), 『부르주아전, 문학의 프로이트, 슈니츨러의 삶을 통해본 부르주아계급의 전기』, 서해역사.

원고 접수일: 2020년 10월 16일

심사 완료일: 2020년 11월 5일

게재 확정일: 2020년 11월 5일

ABSTRACT

---

The Narratives and Mentality of the April Revolution  
by the Liberals:

Focusing on the Comparison between *Dong-A Ilbo* and *Sasangye*

Yun, Sang Hyun\*

The appropriation of the subject of the April Revolution is closely linked to the character of the Korean liberals of the 1950s. *Dong-A Ilbo*, which encouraged the confrontation with the government, quickly disengaged the university students out of the front of the April Revolution and called them the security forces to maintain system order. Through the heroic narrative structure of pioneers, victims, and rescuers, they eventually made the ‘university student’ the hero of this movement. As liberals, they shared an elitist perception of the people, but *Sasangye* and *Gyeonghyang Shinmun* had a religious and moral inclination such as Protestantism and Catholicism. 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itself as the ‘subject’ of the resistance movement for freedom and rights, the ‘Intellectual Revolution’ in which the role of intellectuals who will lead, enlighten, and guide young students mentally by emphasizing the mental revolution as a future task of the April Revolution is inevitable.

---

\*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History, Kyungnam University

Intellectuals who were in the unstable position of petty bourgeois in society, through preparatory theories such as that of Ahn Chang-ho, longed for a material basis for the growth and stabilization of the unstable intellectual class and an expansion of the time and economic preparation period.